

수입개방에 이렇게 대처한다

- 일 시 : 1987년 6월17일(수) 오후 5시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이인형(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과장)
김영환(한국양계연구소 소장)
- 정 리 : 김용화(본지 기자)

김영환: 양축가(양계생산자)들의 관심은 수입개방자체에 있다기보다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행정방향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몇일 후(7월 1일)면 시장어디에나 진열하게 될 수입통조림과 국내 생산물의 병존시기에서 변화되어가야 할 우리의 행정조치 여하에 따라 양계산업이 더욱 질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자체가 위축될수도 있는 문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과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수입개방을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

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양계산업은 국제경쟁력 있어 수출도 가능

이인형: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농림수산부에서 최선은 다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개방이 됐습니다. 작년에 칠면조육과 기타 가금육과 식용설육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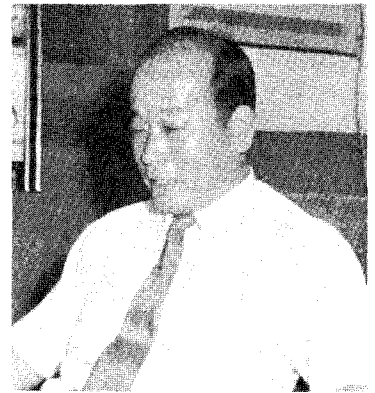
이번에는 돼지고기·닭고기 통조림, 소세지 외에 소세지와 유사한 기타 조제 식료품이 개방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85년 11월에 수입개방이 예시가 됐

던 일입니다. 86년에 닭고기 57t 이 수출됐고 가금고기 통조림이 9.6t 수출이 됐습니다. 일부에서 말하기를 생산비절감을 지금보다 10%정도는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양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 정책 개선해서 생산비 내려야

김영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란과 닭고기 생산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생산비를 낮추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

“타 육류소비 증가에 비추어 볼때
 닭고기 소비증가는 4~5%선에서
 머물렀다.
 이것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일수도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이인형 과장

이지만 생산원가 중 계란의 경우 80%가 사료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계란생산 원가 중 사료비가 70~75%로 알고 있는데 육성할 때 발생하는 육성상각비라는 항목이 나타나 그 속에 사료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성원가상각이 약20%에 해당되는데 그 중 70%가 사료비이므로 실제 사료비는 14%가 증가한 80~84%가 되고 있습니다.

이말은 양계장에서 1년간 지출하는 비용중 약 80%가 사료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건비2%, 약값2%, 병아리값4%에서 원가절감을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쿼터의 철폐와 관세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산비절감을 위한 생산자 노력 필요해

이인형: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생산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계 관련업체

정비지침을 발표하여 시행중인데 사육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폭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생산농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계와 계사관리입니다. 대부분은 잘하지만 왕왕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육농가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소비가 연간 4~5%증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80년대 들어 11%씩 증가를 보였던 점을 감안 한다면 뭔가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계산물 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점차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농가와 육종업체가 노력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산비 인하요인 너무 많다

김영환: 일본 같이 관세율을 0%로 인하하거나 쿼터제를 없애

는 방법이 사료비를 대폭 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학계의 연구보고를 보면 사료값이 제도적 개선으로 쉽게 20~30%까지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생산비중 80%가 사료비일때 30%가 인하된다면 생산비 24%절감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은 엔화 강세이후 일본이 점차 닭고기 수입국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점을 중시하여 대비책을 세워나간다면 수출문제가 비 현실적인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겨울철에 값이 비싸고,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값이 싸다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집중 투자를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양계산업의 계열화 적극지원으로 유통문제 해결할터

이인형: 다음은 유통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닭고기와 돼지고기 통조림이 개방되기 때문에 육계산업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소장

첫째로 유계산업도 계열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산이 피잉되거나 부족할 때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질 주체가 없습니다.

둘째로 계열화가 되면서 닭고기를 상품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탁도계 위주로는 닭고기 소비가 늘 수도 없고 국민의 식생활 기호에도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계열화를 위해서 매년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비 절약이 생산비 절감의 첩경

김영환: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사료비를 쉽게 10%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색산란계의 1일 평균 사료섭취량이 120g이고 갈색계가 125g인데 유럽의 경우 백색산란계가 110g, 갈색계가 113g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십년씩 채란업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새로운 사양관리 기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기술보급을 확대

“사료비 절감문제가 생산원가를 낮추는 관건입니다. 수년씩 양계업을 한 사람이 올바른 사양관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생산비절감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량 증가하면 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용할 계획

이인형: 정부에서도 사료정책을 신중히 연구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방은 되었지만 소나기식으로 수입되면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무역거래법 제32조에 보면 어느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수입이 과도하게 되어서거나 수입품의 값이 싸서 발생할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 상공부에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품분류는 6~7천개가 있는데 1만개 이상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없이 사양관리 개선 불가능

김영환: 과거에도 안정기금제

도가 있었는데 결국 사료비만 높이는 기여 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사료비를 인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다음 제가 생산자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생산성을 향상시킬려면 사양관리 기술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양관리 기술이 개선되려면 시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처럼 노동력만 투자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설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그 밖에는 하부조직 즉 유통부분이 튼튼해야 한다고 보아 유통과정에서 양계산물을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격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합니다.

양계 관련 업체 정비 지침으로 산업안정화 노력할 터

이인형: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양관리 개선이나 가격안

정을 위해서 이번 양계관련 업체 정비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김영환: 이과장님은 수입개방된 설육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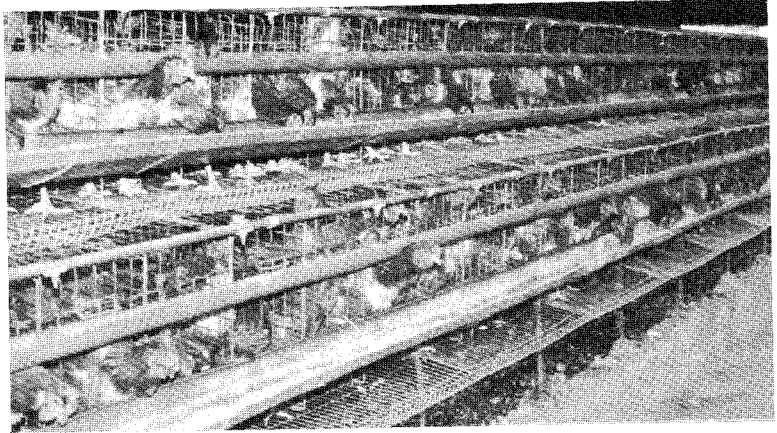
이인형: 설육의 정의는 상품분류에 의하면 머리, 발, 꼬리, 젖부분, 껍질, 내장(염통, 간, 허, 콩팥, 지라, 취장)등 입니다.

양계산물을 이용한 가공 산업도 육성되어야

닭고기와 계란은 수출가능성도 있다고 보며 그 방향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화 위주의 정책방향은 어렵다고 봅니다. 가족사업으로서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앞으로 제일 큰 문제는 가공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계장단위의 상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산물 품질 향상이 급선무

김영환: 제 생각은 도계장이 기존의 유통체계가 담당하던 수집에 대한 기능, 운송능력, 자금, 도계후 판매대금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자를 보호육성한다는 데에는 동감입니다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유도해나가게도 격려를 해줘야 하는 방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이인형: 양계의 경우 사육 수수로 볼 때 기업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계산업의 규모적정화의 정책의 모 있어야

김영환: 소군업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에는 첫째 대군업자를 못크게 해서 보호하는 하향식 조정 방법이 있고, 둘째는 소군업자가 대군업자와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상향식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소군업자가 대군업자와 경쟁할 수 없는 것이 정보, 자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까?

소군업자가 모인 협동조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소군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업 협동조합이 그 기능 발휘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소군업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며 대군업자는 나름대로 지도육성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간다면 양계산업수준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업자 적극 지원할 방침

이인형: 좋은 생각입니다. 축협

의 미비한 사항은 점차 발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대규모화가 꼭 바람직하다고 믿진 않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직원고용의 부담이 생기고 시설비에 과대한 자금이 투입되므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반면 소규모일 경우 가족단위 운영이므로 잇점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규모일 경우는 병아리 사료 등 자재 구입이 용이하지만 소규모일 경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이번 양계관련 업체 정비 지침을 제정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금 지원만 해준다고 그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지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했잖습니까. 정부의 예산관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금지원 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소규모 농가가 견디어 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견해입니다.

축협기능 활성화가 소규모업자 보호하는 길

김영환: 자금지원을 쉽게 말하



면 현찰구매와 외상구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축협조직이 사실 계열화조직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공동구매 쪽만 생각하게 되는데 판매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잘 안돼서 인지 그 기능발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천불이 된다고 볼때 1가구 4인 기준해서 12,000불 소득이 되어야지 중산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월1,000불 소득이 될려면 1달에 1백만원 정도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양계를 1만수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3만수 규모는 돼야 중류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만수 이하가 되면 소득발생은 되지만 생활비로 들어가는 양이 있어 양계산업 자체는 규모가 축소되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만수 이상농가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몇명 안됩니다. 소군업자가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농가 부업양계도 보호 육성하겠다.

이인형: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채란 양계의 경우 3만수면 기업이라고 해야 합니다. 1만수가 1일 7천개의 계란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개월의 소득은 굉장한 액수가 되거든요. 90년대에 가면 물론 규모가 커져 단위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써는 농사지으며 생활비에 보태쓰는 소규모농가를 보호육성할 방침입니다.

75년도에는 토크 1개에 계란 1개였던 것이 지금은 3개가 있어야 될만큼 단위가 변해 갑니다. 굳이 '옛날 생각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유통에 문제가 많다고 들 하는데 유통이 현대화되고 값이 싸고 편히 먹을 것이라

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통이 근대화 될 수록 유통비용이 커져서 소비자 가격은 비싸집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과정의 중간경비는 어느나라보다도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 문제가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되어야

김영환: 저희가 말씀드린 유통상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의 경우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는 생산자들이 단합해서 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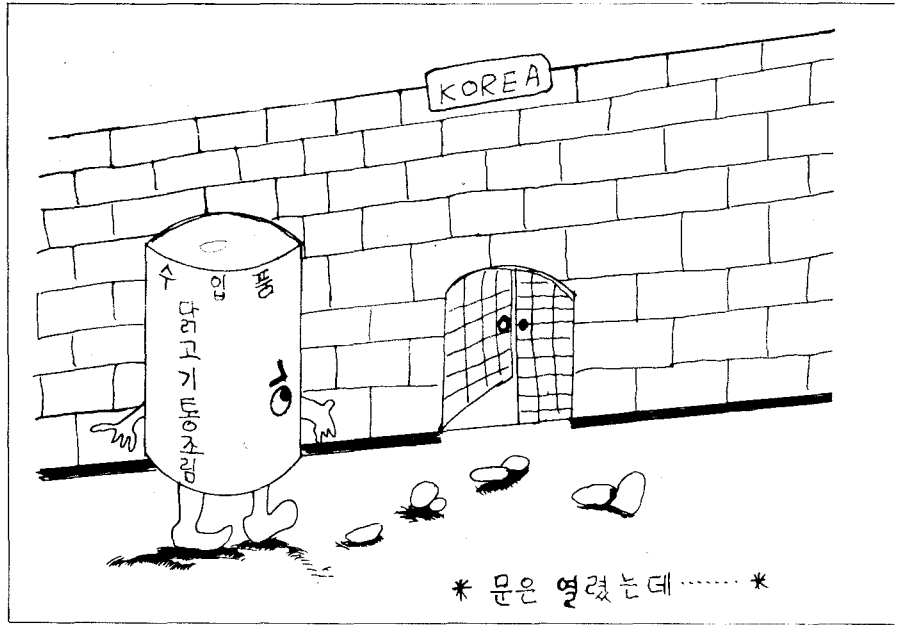
이인형: 전남과 경남지역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면 그대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서울지역도 생산자 중심으로 조직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정부에서도 계란 포장하는 것에 1년에 1억 5천씩 두어개 회사를 선정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G.P 사업이 성공하면 대량소비처에 정기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어느정도 정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가격하락시 수매하는 방법으로 조절해 나간다는 점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방역에도 힘써야

김영환: 다음은 생산원가 절감에서 사료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질병예방입니다.

종계장, 부화장 차원에서 우선 예방이 중요하고 다음이 일반생산농가에서 어떻게 관리하여 질병발생을 줄이느냐인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가축위생연구소나 가축보건소는 질병을 연구하는 곳이고 예방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단해 병원을 찾아내어 투약 방향을 제시해 줄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자금지원은 어떻습니까.



민간주도가 서비스 질이 높아

이인형: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단합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협회에서 계군 혈청검사 사업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현재 사료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신제조 회사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정부의 강한 의지 필요

김영환: 문제는 추백리나 MG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밀지를 않으면 안됩니다.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화란이 일본에 계란을 수출하는 것도 추백리와 MG가 후리(free)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종계수출을 하다 중단한 것도 질병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부가금 제도에 있어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5%만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세가 35%에서 30%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가금을 받으면 양계산업 생산기반조성에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금을 붙여주는 방안이 꼭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관세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어떻게 수입을 막느냐 하는것입니다. 상품분류는 CCCN분류를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해석의 차이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질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개방은 돼도 좋은데 닭의 경우 경쟁력은 있지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료비여서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생산자가 일치단결 해서 난관극복하자

이인형: 수입개방과 더불어 앞으로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되리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생산과열이다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판에 수입개방이 실시되어 양계농가들이 불안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정부는 생산자와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나하나 난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양축가 여러분이 이해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영환: 오랜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